

여야, 공수처법 최종 담판서 '처장 추천' 추가 협상키로

“양당 원내대표공수처장 추천 밀도있게 협의키로”

공수처법 개정 일단 멈출 듯...이견 좁힐지 미지수

여야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가진 최종 담판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키로 했다.

이로써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은 일단 잠시 유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그동안에도 여야 간에 입장차가 컸던 만큼 추가 협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회동 뒤 민주당 홍정민·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양당 정

책위의장과 수석부장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박 의장과 티타임을 가진 뒤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경제·노동 관련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논의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협의할 때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이미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두 차례나 추천 작업 무산을 선언한 바 있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좀처럼 좁혀지지 힘든 시각차를 보였다.

박 의장은 6년 만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와 16대 국회 이후 가장 높은 법안 처리 실적 등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인간적 신뢰와 신뢰를 많이 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곡경(旁岐曲徑·옆으로 난 셋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말이 있다. 옆길이나 굽은 길이 아니라 바

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과정처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면 협치가 좀 더 많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았다”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정례회 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게 해주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도 각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법들은 무난히 잘 처리를 했지만 몇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야당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를 지연·회피시킨 관계로 심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9일)면 종료된다. 오늘부터라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양당이 성실하게 심의를 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며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각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 광주·전남 주요핵심 국비 예산 증액 성과

그린 수소 등 미래먹거리 사업 기반 구축 예산 등 신규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을)은 2021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동용 의원은 전남·광주지역을 대표하여 기재부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2일 국회를 통과하는 2021년도 예산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요청한 국비 요청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상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주요 국비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스택개발 및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그린 수소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남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하나로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종지원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 전남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항만인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 확보를 위해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세풍 산단 부지 매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여수항 재개발 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등이 다수 증액되었다. 광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



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생형 일자리 기반 구축 및 정착 지원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신산업으로 친환경 공기산업육성 기반 구축,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개발 사업 등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R&D 다수의 사업 확보의 성과를 이뤄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안철수 “국민 화 돋운 ‘방화 개각’ 변창흠, 오기·독선의 결정판”

“부동산 정책 대실패...안하느니만 못한 인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와대의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에 대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放火) 개각이자 캠프도 인사를 위한 보은 개각”이라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반성도, 사과도 없고 끝까지 오기를 부린다면 관용을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면서 “이런 인사라면 25번째 부동산 정책도

대실패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무엇보다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 분노를 주는 개각 1순위 법무 장관은 왜 빠졌나. 끝까지 대 신 손에 피를 묻힐 사람이 필요한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정은正道(正道)를 가야 하고 인사는 순리(順理)에 따라야 한다”면서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지 않거나, 바꾼 것이 전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사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문제인 정권의 미래는 추미에 바람에 몰락하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같이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지 집권하기만을 위해 DJP연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보수 인사인 박태준·이한동 총리를 임명하고 반대 세력의 일정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 역시 자신에 직언하던 이회창 감사위원장을 총리로 발탁해 정권의 면모를 일신하려 노력했다”며 “문재인 정권이라고 왜 못하겠는가”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잘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검찰을 개혁할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부정선거의 ‘부’자도 나오지 않게 할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